

가스공 “공공부문 AI 대전환 선도” AI 기반 천연가스 공급시스템 구축

공급분야 AI 활용방안 기술 교류회
정부 ‘AI 3대 강국 도약’ 전략 대응
4개분야 추진과제, 사례 등 공유

한국가스공사가 정부의 ‘AI 3대 강국 도약’ 전략에 발맞춰 인공지능(AI) 기반 천연가스 공급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섰다.

가스공사는 지난 15~16일까지 이틀간 대구 본사에서 ‘2025년 공급 분야 AI 활용방안 기술 교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류회에는 본사와 전국 9개 지역본부에서 실무 전문가가 약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천연가스 공급시설에 대한 AI 기반 스마트 공급 시스템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가스공사는 AI 디지털 대전환 시기에 발맞춰 지난 2023년부터 유인 공급관리소 28곳을 무인 운영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해 인력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성과를 냈다.

이어 올해는 공급설비 유지보수, 천연가스 주배관 관리 등 공급 업무 전 분야로 범위를 확대해 AI 스마트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다.



최연태 한국가스공사 사장(왼쪽에서 여섯번째)과 임직원들이 지난 15~16일 대구 본사에서 ‘2025년 공급 분야 AI 활용 기술 교류회’를 개최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가스공사

이번 교류회에서 참석자들은 운영·보수·관로·안전 등 4개 분야별 추진 과제와 타사 벤치마킹 사례를 공유하고, 공급 분야에 대한 AI 활용 방안 발굴을 위해 열띤 토의를 이어갔다.

특히 ▲AI를 활용한 무인 운영 시스템 고도화 ▲가스 공급설비 예지보전 스마트 플랫폼 활용 ▲객체 인식 시스템 도입을 통한 천연가스 주배관 관로 순찰 ▲AI 기반 ILI(In-Line-Inspection) 데이터 분석 구축 등 공급 분야 핵심 사업에 대한 AI 활용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가스공사는 추후 심의회를 통해 AI 연계성, 파급성, 실현 가능성 등 여러 측면에서 최적의 아이디어를 선정 및 검토해 실제 사업 진행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인공지능과 스마트 시스템을 천연가스 공급 업무 전반에 적극 활용해 효율성과 안전성을 혁신함으로써 공공 부문의 AI 대전환을 가장 먼저 이끌고 정부 정책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에너지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남부발전, 양수발전 기자재 국산화 초석 다져

두산에너지빌리티와 ‘맞손’
안정적 공급망 구축 추진도

한국남부발전은 두산에너지빌리티와 지난 16일 분당두산타워에서 ‘양수발전 기자재 국산화 상호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확대되는 양수발전 사업에 대비하고, 핵심 기자재 설계·제작 기술 자립을 목표로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남부발전은 향후 건설 예정인 양수발전소를 실증 테스트베드로 제공하고, 국산 기자재 판로 개척도 지원한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그간 축적한 발전 기자재 설계·제작 노하우를 활용해 양수발전 핵심 기술 확보에 속도를 낸다. 양 사는 단순 기술 자립을 넘어,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까지 협력함으로써 국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김준동 남부발전 사장(왼쪽에서 여섯번째)과 정연인 두산에너지빌리티 부회장(왼쪽에서 일곱번째) 등 양사 임직원들과 지난 16일 ‘양수발전 기자재 국산화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남부발전

기여할 계획이다.

양 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단순히 ‘기술 자립과 국산화’ 뿐만 아니라, 국산화된 기자재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양수발전 기자재 핵심 기술의 자주적 확보를 가속화하고, 국내 기술 경쟁력을 제고해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준동 남부발전 사장은 “국내 양수발전 시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번

협약이 기술 자립과 국산 기자재 활용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내 기술력과 산업 생태계를 강화해 미래 에너지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정연인 부회장은 “최근 양수발전 건설이 늘어나며 주기기 설계 및 제작 기술 자립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실증환경을 제공한 남부발전과 협력을 통해 국산화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사업 부정행위 적발

환경부, 관리 부실·보조금 횡령 등 확인

전기차 지원을 받는 사업자 중 정부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충전시설을 부실하게 관리한 사례 등이 당국의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17일 국무조정실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

업’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충전기 관리 부실 ▲부적절한 사업비 집행 ▲보조금 횡령 등의 위법·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환경부와 함께 관련 지원사업 운영 실태를 합동 점검했다. 이 지원사업은 지난 2021년

부터 2023년까지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실시한 바 있는 충전시설 설치 사업이다.

점검 결과 충전시설 관리 부적정 사례가 2만4000여 기로 집계됐다. 또 부적정한 사업비 집행(도합 97억7000만원), 보조금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사례(도합 121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정부는 집행잔액 반납·미작동 충전기 점검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내년 농지은행 정부 예산안 2.4兆 확정

농어촌공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 중인 농지은행사업의 내년 정부 예산안이 2조4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청년 농업인 인재육성을 위한 3개 사업이 중점적으로 확대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다.

농어촌공사는 상숙·이농 등 비농업인과 고령·은퇴농이 보유한 우량 농지를 매입한다. 이를 통해 청년 농업인에게 낮은 임대료로 지원하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에 1조6000억원을 투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2025년 대비 약 68% 증가한 수준이다. 청년 농업인이 농촌에 정착하는데 큰 어려움으로 꼽히는 농지 확보를 안정적으로 지원한다.

청년 농업인이 원하는 농지를 공사가 매입한 뒤 매도를 전제로 최장 30년간

장기 임대·매도하는 ‘선임대후매도사업’에 770억원이 반영됐다. 올해 대비 578억원 증액해 약 300% 증가했다. 청년 농업인의 농지 구입 부담 완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시설 영농을 선호하는 청년 농업인 수요에 맞춰 스마트팜 지원도 확대한다. 공사 보유한 농지에 스마트팜 시설을 조성해 임대하는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에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75억원을 투입해 15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어촌공사의 정인노 부사장은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농업인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예산 확보와 더불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2026년 농지은행 사업의 차질 없는 집행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농식품부, 6개 군에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내달 13일까지 시범사업 참여 군 모집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군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9월29일부터 10월13일까지 접수 받은 뒤 10월 중순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 소멸위기, 지역 간 격차 심화 등 국가적 문제를 극복하고 균형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한 목적으로, 소멸 위험이 큰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대상 사업 신청을 접수한 후 지역여건 및 추진의지 등에 대한 평가를 거친다.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한다. 이 밖에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군은 거주 중인 모든 주민에게 2026년부터 2027년까지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개인당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이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멸 위기 농어촌지역에 남아 지역 자립이 역할을 해온 해당 지역주민

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한 보상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또 기본생활 유지를 돕는 체감 가능한 정책 수단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농식품부와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동사업이 현금성·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는다. 기본소득이 마중물이 돼 지역경제 및 사회서비스 활성화 등 해당 지역의 활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노력을 적극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범사업 대상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이를 통해 정책효과를 분석하고 본사업 방향도 검토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고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고 말했다.

또 “소멸 위기 농어촌지역 주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동시에 지역 간 격차 해소 등을 통해 균형성장을 견인해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공정위, ‘후원판매’ 위장 다단계 영업 제재

울포레코리아에 시정명령·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후원방문판매업체(㈜울포레코리아)의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울포레코리아는 화장품·건강식품을 주로 판매하는 업체로, 매출액은 약 19억원, 판매원 수는 4600명에 달한다. 회사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만 등록한 상태에서 사실상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을 전개했다.

현행법상 후원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는 유사한 구조를 띠지만, 수당 지급 범위에 차이가 난다. 후원방문판매는 판매원의 실적이 직속상위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주는 구조다. 반면 다단계판

매는 다수 단계로 이어져 수당이 분배되며, 더 엄격한 규제가 적용된다. 후원방문판매업자는 자본금 요건이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의무 등이 면제되지만, 후원수당 지급 단계가 1단계를 넘아가면 다단계판매회사로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울포레코리아는 ‘플래너-매니저-디렉터-마스터-지사장(점장)’ 등 3단계 이상 판매조직을 구성하고, 지사장 또는 점장에게 산하 판매원 전체의 실적과 연계된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이는 전형적인 다단계 영업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후원방문판매업체가 다단계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 기자